

확장적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가?

-헤리티지 경제자유도를 이용한 실증분석-

Can the economic growth boosted by fiscal expansion be sustainable:
Evidence from Heritage Economic Freedom Index

2010. 4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요지>

본 연구는 '케인즈(Keynes)적 국가개입주의' 패러다임을 비판하는데서 출발한다. 2007년 미국 발(發)금융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확대했다. 재정지출 확대의 성장에의 '단기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재정지출 확대가 '자족적 성장 모멘텀'의 충분조건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 한다”는 가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4~2008년에 걸친 176개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에 관한 패널자료를 이용했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출비중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고,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규모' 간에 양방향성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야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유지할 여력이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의 '구축'(crowding out)을 가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여력(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I. 문제의식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미쳐 회복되기도 전에 유럽 발(發) 재정위기가 촉발돼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재정악화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2.5%이며 정부부채 비율은 112.6%에 이르고 있다.¹⁾ 27개 EU 회원국의 GDP 대비 총(總)재정적자 비율은 2008년 2.3%에서 2009년 6.9%로 급등했다. 국가부채 비율은 2008년 61.5%에서 2009년 73%로 높아졌다. 사정이 급박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10회계년도의 재정적자는 1조5천억달러로 GDP 대비 10.6%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급기야는 국가의 법정 부채한도를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²⁾

우리나라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 발(發)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안정을 위해 2009년에 총 28.5조원의 ‘수퍼 추경’을 편성했다. 확장적 재정 집행으로 2009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5%를 기록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국가채무³⁾도 크게 증가했다. 2009년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이고, 2010년 국가채무는 407조원으로 GDP의 36.1%에 달할 전망이다. 2002년(국가채무 133조6천억원, GDP대비 비중 18.5%)과 비교하면 무려 국가채무는 3배 이상 증가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가량 높아졌다.⁴⁾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돌출된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일정 부분 나타냈다. 비근한 사례로 우리나라는 2009년에 0.2%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했다. 이는 2009년 초 마이너스 2% ‘예상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률이다. 정(+)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에는 ‘재정지출 확대’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재정지출 확대의 성장에의 ‘단기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가 ‘자족적 성장 모멘텀’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해 추동된 성장은 지속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1)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라트비아 등 5개국의 재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위험(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은 높을 수밖에 없다. 2010. 2. 5 현재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은 407.57bp(1bp=0.01%)에 달하고 있다.

2) 미국 연방하원은 2010. 2월 정부의 부채한도를 종전보다 1조9000억달러 증액한 14조2940억달러로 확정하는 법안을 찬성 233표, 반대 187표로 통과시킨바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의하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2009년 7조5450억달러(GDP 대비 53.0%)에서 2011년 10조4980억달러(68.6%)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국고채, 외환평형기금채권, 지방채 등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4) 국가채무에 당장 잡히지는 않지만 결국 국가부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빚’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상당수 공기업들이 정부가 해야 할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신 떠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 부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부채’를 더하는 경우 광의의 국가부채규모는 2009년 9월 말 610조8000억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1%로 높아진다.

재정위기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새롭게 표출된 현상이 아니다. 재정 위기는 완급의 차이가 있었을 뿐 늘 잠재되어 있었고 그 근저에는 ‘케인즈’(Keynes)적 정책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안정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정책과신이 단기 정책처방을 빈발(頻發)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재정수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정지출 관행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재량적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난 후 새로 개편될 신경제질서 하에서의 비판적 성장률 전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재정을 통한 안정적 경제운영’이라는 ‘국가 개입주의’ 패러다임이 장기적인 성장의 문제에서도 실효성(實效性)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연구가 던지는 질문이다.

본 논문은 ‘케인즈(Keynes)적 국가개입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그 구체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개입주의는 부지불식간에 ‘정책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정책은, 정부가 민간부문보다 ‘정보 우위’에 있으며 인간의 행동은 정책이 의도한 대로 움직여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그러나 ‘지식의 관점’에서 정부부문 역시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않으며⁵⁾, 인간의 행동은 통상적으로 정책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적 정책을 통한 경제안정화 정책은 늘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⁶⁾ 하물며 국가개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 사고는 ‘치명적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국가개입주의는 단기적 문제해결에 경도된 나머지 ‘기계론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크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성장은 재정정책 그 이상의 문제로서, 성장의 문제를 ‘투입(재정)과 산출(성장)’의 기계적 관계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인간행위에 내재된 ‘유인과 동기’ 그리고 ‘경제 하려는 의지’를 간과하고서는 장기적인 성장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셋째 국가개입주의는 태생적으로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역기능’을 제대로 성찰하기 어렵다. 재량적 재정정책은 국가부채의 누적 이외에도 국민경제에 ‘숨은 비용’을 배태시킨다. 경기 침체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수정되고 그 결과 산업 내 그리고 산업 간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시기이다.⁷⁾ 따라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 이는

5) 상론할 거를은 없으나, ‘지식의 문제’는 하이에크(Hayek) 자유주의 경제학의 요체이다. 정부도 ‘지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재량적 정책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시장과 정책은 그 작동기제가 다르다. 시장은 경제주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실현을 도와 줄 뿐 그 자체로서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갖지 않는다.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정책은 정책당국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책은 특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포기되거나 희생되는 다른 가치들과 공존해야만 한다. 정책은 한편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책은 특수이익집단의 포로가 되거나 이들의 지배를 받기 쉽다.

7) 경기침체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론의 해석이다.

실패에 대한 ‘사후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장의 위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미봉은 문제를 뒤로 미뤄, 자생적 성장기반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인위적 경기부양은 ‘정부에의 의존’을 타성화시킨다.

넷째 국가개입주의는 태생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에 대해 사려가 깊을 수 없다. 경제학은 희소성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의 틀이다. 정부부문과 민간부문도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합관계’에 놓여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원사용 상의 효율이 민간부문이 높다면, 민간부문이 지배하는 ‘자원의 몫’이 커야 경제 전반의 효율이 제고된다. 상대적으로 정부지출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부문의 자원사용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규모의 팽창이 가져오는 기회비용은 이처럼 2중적이다.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을 ‘구축’(crowding out)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 의거해 본 논문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장기효과’를 추론하고자 한다.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 한다”는 가설(假說)의 타당성을 경험 자료를 통해 보일 수 있다면, ‘케인즈적 국가개입주의’에 대한 비판의 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절에 이어 II절에서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선행연구의 개관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이다. III절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소개한다. IV, V절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VI절에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점을 기술한다.

II. 선행연구 개관(概觀)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와그너 가설’의 검증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과관계에서 ‘방향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경제성장으로부터 재정지출 규모 확대에 이르는 인과관계가 아닌 그 반대의 인과관계라 하더라도,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을 제고 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다. 모형 설정에 따라 경제성장에의 효과는 달리 추정되지만, 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⁸⁾ 셋째는 재정지출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재정지출의 ‘구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지출항목에

8) 정부지출의 저생산성과 비효율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적하는 논의는 많지만, 성장을 위해 정부의 규모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따라 경제성장에의 ‘부(負)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출을 총계했을 때는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공통적으로 ‘큰 틀’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을 끌어올리는, 즉 경제성장에의 정(+)의 효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에 장기적으로 부(負)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일종의 역설을 보이려는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기존 연구는 ‘투입-산출’ 유형의 정량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양적 변수’(hard data)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질적 변수’(soft data)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지출 비중도 단순히 GDP 대비 몇 %의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정부지출의 비중이 클수록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의 자유도”(freedom from government)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처방 대신 경제자유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도적 처방이 권고된다.

1.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 인과관계

Wagner(1890)는 경제개발 수준과 공공부문 성장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와그너의 가설의 요체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상대적인 규모가 팽창한다는 것이다.

Afxentiou and Serletis(1991)은 1947년부터 1986년까지 캐나다의 정부지출과 GDP자료를 이용하여 Granger-type의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정부지출과 경제성장간에는 양방향 모두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Singh(1984)은 1950년부터 1981년까지 인도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국민소득과 정부지출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jointly-dependent)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2개의 실증분석 공히 인과관계 검정에 앞서 변수의 안정성(stationarity)과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지 않고 분석 자료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규선(2004)과 김의섭(200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황규선은 우리나라의 1957~2000년의 기능별 재정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와그너의 법칙을 실증분석했다.⁹⁾ 기능별로 투자지출과 교육지출, 사회복지관련 지

9) 시계열자료분석 기법을 충실히 적용해 실증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ADF검정법과 PP검정법을 이용하여 시계열자료의 안정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수준변수들은 모두 불안정적인 I(1)계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Johansen의 공적분 기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균형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규명해본 결과 두 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출의 경우는 장기탄력성이 모두 1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와그너의 법칙이 지지됨을 보여주었고, 일반행정지출의 경우는 탄력성이 1 보다 작아 와그너가 제시하는 법칙이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섭(2009)은 1970~2005년간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와그너 법칙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관련변수의 '안정성'과 '장기적 균형관계'를 확인한 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 재정지출과 국내총생산이 장기적으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한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성순(2009)은 우리나라의 1970~2007년 연간자료와 VAR 모형을 이용해 재정지출과 세율변화가 일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변수의 변화가 일인당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충격반응(impulse response)이 '장기 균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누적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재정지출의 증가와 감세는 경제성장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 유효성을 살펴본 결과, 민간부문의 투자와 인적자본 형성이 공공부문의 확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성장확충보다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m(1986)은 국민경제의 생산(Y)을 정부부문(G)과 민간부문(C)으로 구분하고 정부부문의 생산이 민간부문에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2부문 생산함수 모형으로, 정부지출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정부부문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의 생산성보다 큰 지 여부를, 국가 간의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 실증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정부생산 확대)이 민간부문에 대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경제성장을 돕는다고 결론지었다.

김용선·김현의(2000)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Ram(1986)의 2부문 생산함수 모형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시계열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는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특정 기업의 독점적 이윤추구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도덕해이를 초래하는 등 재정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배분된 데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3. 재정지출 구성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Aschauer(1989)는 정부지출을 포함하는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정부지출을 ‘군비 지출’ ‘소비지출’ ‘자본지출’로 구분해 각 구성요소가 민간부문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949~1985년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①정부의 자본축적이 단순소비지출이나 군사비지출 보다 더 큰 생산성 향상을 보였으며 ②군사비 지출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자본 지출 중에서도 핵심 기반시설(core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1990)는 정부지출을 소비성 정부지출과 투자성 정부지출로 나누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자성 정부지출은 공공자본의 형성을 가져오고, 이것은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경제성장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투자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개별경제주체의 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수입을 오로지 투자성 정부지출로만 사용한다면 공공재 생산 및 이전지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지순(1988, 1991)은 공공지출을 ‘소비성 지출’과 ‘생산성 지출’로 양분하여, 각각을 생산성 및 효율 측면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세분화한 성장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부지출 세분화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과 ‘경제성장률’ 간에 ‘역(逆) U자형’ 관계가 성립한다. 정부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점차 커지다가 일정시점에서는 극대화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정부지출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장률은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지출 중 소비성 지출은 경제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산성 지출 비중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지출이 불변인 상태에서 투자성 정부지출의 비중을 크게 하면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III. 실증분석을 위한 예비 논의

1. 분석 데이터

본 논문의 분석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친 세계 176개국의 ‘일인당 GDP’와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다. 총 표본수는 ‘880’개(176국*5개년) 이다. 일인당 GDP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인구 및 GDP 데이터로부터 추출했으며, 경제자유도는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Heritage Foundation)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Index)를 인용하였다.

헤리티지 재단(연구소)은 자체 기준에 의거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를 발표한다. ‘경제자유도’는 10개의 하위 자유지수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때 각각 하위지수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하위 지수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2007년에 <표-1>과 같이 경제자유도 체계를 개편했다¹⁰⁾. ‘통화안정성’과 ‘임금과 가격’ 지표를 ‘화폐부문자유도’(Monetary Freedom)로 통합하고¹¹⁾ ‘노동시장자유도’를 신설했다.

<표-1> 경제자유도 체계 개편

10 Factors (old methodology)	10 Freedoms (new methodology)
Regulation	Business Freedom
Trade Policy	Trade Freedom
Fiscal Burden	Fiscal Freedom
Government Intervention	Freedom from government
Monetary Policy	Monetary Freedom(80%)
Wages and Prices	Monetary Freedom(20%)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Freedom
Banking and Finance	Financial Freedom
Property Rights	Property Rights
Informal Market	Freedom from Corruption
N/A	Labor Freedom

자료: 2007 Index of Economic Freedom

10) 2007년 이전에는 각 지표 값을 ‘1~5’의 스케일로 평가하였으나, 2007년에 이를 개편해 모든 지표 값을 ‘1~100’의 스케일로 평가했다. 상세한 내용은 Heritage Foundation 2009 Index Guideline : Methodology for the 10 Economic Freedoms 을 참조.

11)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률을 80%, 가격통제 여부를 20% 반영해 계산했으며, 지표 값이 높을수록 ‘화폐부문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는 경제자유도를 구성하는 10개 하위지수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은 굵은 글씨는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 명을 표시하고 있다.

<표-2>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하위지수

하위 경제자유지수	지표	비고
기업활동자유도	Business Freedom busin_fr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도
무역자유도	Trade Freedom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정도
재정자유도	Fiscal Freedom (fiscal_fr)	개인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및 GDP대비 조세수입
민간경제활동 자유도	Freedom from Government (gov_fr/gov_size)	GDP대비 공공부문(지방정부포함)을 제외한 민간경제활동의 비중
화폐부문자유도	Monetary Freedom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 및 가격통제 여부
투자자유도	Investment Freedom	외국자본 및 국내자본 투자자유 정도
금융산업자유도	Financial Freedom	금융산업 국가소유 및 중앙은행 독립성 여부
개인재산권보호	Property Rights	개인재산권 보호 정도
반(反)부패자유도 (반부패지수)	Freedom from Corruption (anti_corrup)	국제투명성기구(TI)의 CPI에서 인용
노동시장자유도	Labor Freedom	노동보호 법제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자료: Heritage Economic Freedom Index

○ 기업활동자유도(business freedom, busin_fr)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에 나오는 “창업, 인허가 및 청산”과 관련된 10개 항목의 기업활동 자유도를 평가해 계산된다.¹²⁾ 지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기업활동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재정자유도(fiscal freedom, fiscal_fr)

재정자유도는 개인과 기업이 그들의 소득과 부를 온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통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 조세수입 측면에서 민간의 조세 부담(Tax Burden)을 지표화한 것이다. 재정자유도는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법인세 최고세율, GDP대비 총조세수입”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개인소득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내려가면 개인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부가 늘어나게 되므로 재정자유도가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GDP대비

12) 평가에 활용된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회수)와 시간(일자), 창업 소요비용(1인당 GDP 대비), 창업 최소자본금(1인당 GDP 대비), 허가 취득 절차(회수) 및 소요시간(일자), 허가취득비용(1인당 GDP대비), 청산 소요 시간(년수), 청산 소요비용(자산 대비 %), 청산 후 자산회수율 (1달러 대비 센트)”

총조세수입이 작아지면, 조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excess burden)도 작아진다. 이처럼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government intervention)이 작아지면 재정자유도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민간경제활동자유도(freedom from government, gov_fr)

GDP대비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을 나타낸다. 말 그대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자유로운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한 지출처럼 생산유발 효과를 갖는 ‘투자성 지출’과 이전지출을 포함한 ‘소비성 지출’을 포괄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한다.

각국별로 투자성 지출과 소비성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의 정부지출을 기준(benchmark)으로 설정하고 정부지출이 ‘0’이면 민간경제활동의 자유도는 ‘100’의 값을 갖는 것으로 계산한다. GDP대비 정부지출규모가 큰 국가는 낮은 민간경제활동자유도 점수를 받는다.¹³⁾

○ 공공부문지출비중(government size, gov_size)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의미하며, 1)식에서와 같이 ‘100’에서 ‘민간경제활동자유도’를 공제한 값을 ‘공공부문지출비중’(government size)으로 정의한다.¹⁴⁾ 이처럼 변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공공부문의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자유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지출비중은 필요한 경우 ‘정부지출비중’과 호환돼 사용된다.

$\text{Government Size} = 100 - \text{Freedom from Government}$ $\text{gov_size} = 100 - \text{gov_fr} \text{ -----}1)$

○ 반(反) 부패지수(freedom from corruption, anti_corrup)

국가의 청렴도를 반영하는 지수로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산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원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청렴한 것으로 평가된다.

13) 민간경제활동자유도는 “ $Freedom\ from\ Government_i = 100 - \alpha \times (Expenditure_i)^2$ ”와 같이 비선형적(non-linear)으로 계산된다. Expenditure는 각 국가의 GDP대비 정부지출 규모이며 ‘0과 100’ 사이의 값을 갖는다. α 는 척도(score) 간의 변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계수로서 0.03의 값을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헤리티지 보고서’ 참조.

14) Heritage Foundation 의 경제자유도 해석에 따르면 ‘민간경제활동 자유도’가 커지면 자유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같은 변환이 갖는 장점은 자유지수 해석의 명료함에 있다. 즉 ‘공공부문 지출비중’이 클수록 경제자유도가 하락한다는 보다 직접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 ‘노동시장자유도’(Labor Freedom)

노동시장자유도는 최저임금제, 고용보호, 해고기준 등 6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지수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⁵⁾

2. 각종 변수의 기초통계량

<표-3>은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한 것이다. ‘일인당 국민소득’(pergdp)은 ‘구매력 평가’에 의한 경상달러로 표시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에 걸친 일인당 국민소득의 평균값은 10,134달러로, 세계 평균치임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치로서, 인구가 작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큰 국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업활동자유도(busin_fr)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지출비중’(gov_size)은 2004~2007년 기간 동안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¹⁶⁾ 이는 2007년에 미국 발(發) 금융위기가 촉발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안정화 차원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을 금융위기가 확산된 ‘이례적 연도’(outlier)로 간주하고, 2008년이 포함되거나 배제된 기초통계량을 <표-3>에 수록했다.

<표-4>는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상관계수행렬(correlation matrix)이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회귀 추정식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는 사전적 기대를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¹⁷⁾

15)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일인당 부가가치 대비 최저임금, 고용난이도, 근로시간조정 난이도, 해고 난이도, 해고의 법정예고기간, 법정 퇴직급여”등 이다.

16) 2007년의 정부지출비중(gov_size)의 세계 평균치는 31.72인 데, 2008년에는 그 값이 34.53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7) 예컨대 ‘기업활동자유도’와 ‘반(反)부패 지수’(청렴도)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공공부문의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투명성이 높은 나라는 기업활동자유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3> 모형 내 각종 변수의 기초통계량

year	variables	pergdp(달러)	busin_fr	fiscal_fr	anti_corrup	gov_size
2004	sample mean	8,472.07	63.64	73.78	40.25	33.47
	t-statistic	8.44	59.06	68.12	21.54	18.58
	sample size	176	151	151	151	151
2005	sample mean	9,307.24	62.82	74.41	40.60	32.96
	t-statistic	8.56	44.24	71.21	22.31	19.33
	sample size	176	153	153	153	153
2006	sample mean	10,198.31	63.68	75.04	41.49	32.16
	t-statistic	8.69	47.27	73.33	23.30	19.38
	sample size	175	153	153	153	153
2007	sample mean	11,089.58	64.23	75.49	41.41	<u>31.72</u>
	t-statistic	8.44	47.02	73.84	23.38	19.11
	sample size	171	153	153	153	153
2008	sample mean	11,722.91	65.16	75.47	40.54	<u>34.53</u>
	t-statistic	8.22	51.14	78.34	25.82	19.08
	sample size	166	175	175	175	175
2004-2007	sample mean	9,756.7	63.59	74.69	40.94	<u>32.58</u>
	t-statistic	17.01	97.22	143.32	45.34	38.25
	sample size	698	610	610	610	610
2004-2008	sample mean	10,134.47	63.94	74.86	40.85	<u>33.01</u>
	t-statistic	18.82	109.80	163.37	52.13	42.59
	sample size	864	785	785	785	785

주 : t-statistic = sample mean / standard error of sample mean

<표-4> 각종 자유도 간의 상관계수행렬

	lpergdp	busin_fr	fiscal_fr	gov_size	anti_corrup
lpergdp	1				
busin_fr	0.6993	1			
fiscal_fr	-0.2257	-0.1941	1		
gov_size	0.5026	0.3651	-0.4557	1	
anti_corrup	0.8054	0.7558	-0.3548	0.5169	1

3.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

<표-5>는 ‘log값을 취한 일인당 GDP’와 ‘경제자유도’간의 관계를 단순회귀 분석한 것이다. Eq-1)에서 보듯이, 경제자유도(score)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q-2)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표준화¹⁸⁾한 뒤 회귀 분석한 것으로, “표준화된 경제자유도”(s_score)는 “표준화된 일인당 국민소득”(s_log(pergdp))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제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원칙이 충실히 준수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제행위의 유인과 동기가 적절히 보호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최소화될 때 경제성고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親)성장적 경제 및 제도 환경’을 갖추는 것이 관건임을 유추할 수 있다.¹⁹⁾

Eq-1.1)과 Eq-2.1)은 ‘인구200만 이하’ 국가를 제외하고 회귀분석한 것이다. <표-5>에서 보듯이 인구 200만 이하 국가를 제외하거나 포함하거나, 추정에서의 ‘질적(質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회귀분석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과 <그림-2>는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산포도로 표시한 것이다.

<표-5> 경제자유도(score)와 일인당 GDP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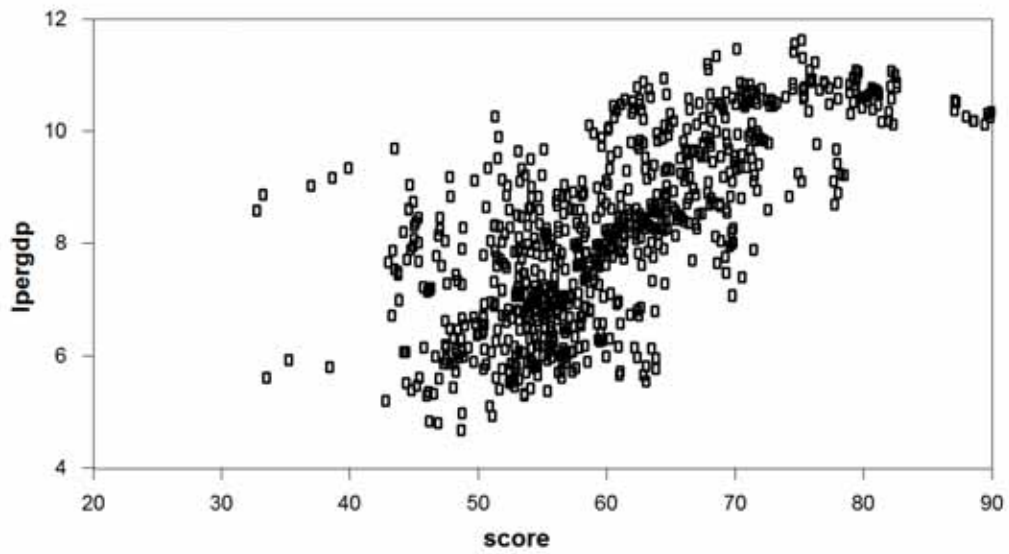
	Eq-1	Eq-1.1	Eq-2	Eq-2.1
	log(pergdp)	log(pergdp)	s_log(pergdp)	s_log(pergdp)
constant	1.2192 (4.67)***	1.2482 (4.32)***	0.1509 (4.67)***	0.1545 (4.32)***
score	0.1151 (26.99)***	0.1139 (24.02)***		
s_score			0.8608 (26.99)***	0.8518 (24.02)***
year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200만 이하	포함	제외	포함	제외
sample size	769	640	769	640
R bar**2	0.4872	0.4750	0.4872	0.4750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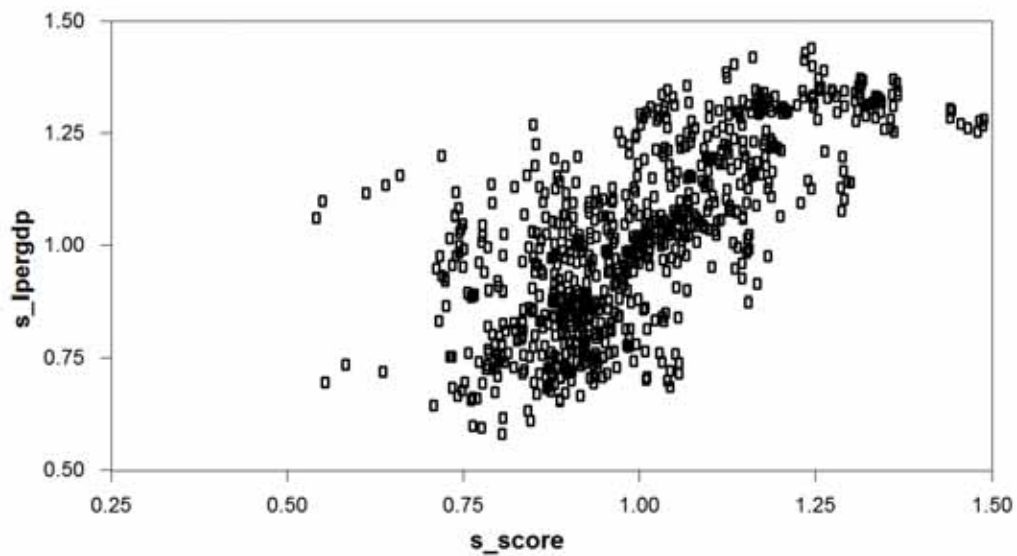
18) ‘s_log(pergdp)’와 ‘s_score’는 log(pergdp)와 score 값을 그 평균값으로 나눠 표준화한 것이다.

19)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은 ‘경제성장의 원천’에 주목한다.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성장요인의 기여를 정량화하고 있다. 신고전학과 성장이론은 정교해 보이지만 사실은 ‘동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식이다. 신고전학과 성장론의 약점은 경제성장을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좁게 본 것이다. 케인즈의 사고 체계도 인간행위의 ‘유인과 동기’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공히 비판을 받는다.

<그림-1>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그림-2> 표준화된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IV. 실증분석: 단일 방정식 추정

1. 경제자유도와 일인당 국민소득 간의 관계: 기본 회귀식 추정

<표-6>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해 경제자유도를 구성하는 각종 하위 자유도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것이다. Eq-3)은 기본회귀식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기업활동자유도’(busin_fr), ‘재정자유도’(fiscal_fr), ‘정부지출규모’(gov_size) 및 ‘반(反)부패정도’(anti_corrup)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자유도’와 ‘재정자유도’, ‘반부패정도’의 정(+)'의 계수 값은 사전적 기대와 일치한다. ‘기업활동자유도’가 개선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과 조세부담률이 낮아져 ‘재정자유도’가 제고되면 민간경제활동의 유인(incentive)이 보장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청렴도가 제고되어, 즉 부패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줄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줄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⁰⁾ 그러나 ‘정부지출규모’가 유의미한 정(+)'의 값을 갖는 것은 본 연구의 기저를 이루는 직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²¹⁾ 만약 정부지출규모를 증가시키기만 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지출규모 변수가 정(+)'의 부호를 갖는 이유로서, ‘재정자유도’(gov_fr)와 ‘정부지출비중’(gov_size)간의 충돌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유사한 재정관련 변수를 중복해서 설명변수로 선택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재정자유도’를 빼고 회귀식을 다시 추정한 것이 Eq-4) 이다.²²⁾ Eq-4)에서 보다시피, 결과는 개선되지 않는다.²³⁾ Eq-3.1)와 Eq-4.1)는 인구 200만 이하의 국가를 제외하고 추정된 식으로, 추정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200만 이하 소규모 국가의 존재가 ‘정부지출비중’ 변수가 정(+)'의 값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20)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재정적자 악화의 원인이 됐는지 소개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한 카페 주인은 한달전 새 식당 개점에 필요한 각종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로 1만유로(약 1500만원)를 공무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주인은 의자와 테이블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해 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살리려 나라 빛 마구 늘리더니... 남유럽發 재정대란 오나, 한 국경제신문, 2010.2.12”

21) ‘정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사전적 기대와 배치된다. 정부지출규모가 커지면 민간경제활동에 정(+)'의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으나 민간경제활동을 구축하게 되므로(crowding out),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2) 재정자유도(fiscal_fr)는 정부 조세수입 측면에서의, 정부지출비중(gov_size)은 정부 세출측면에서의 자유도를 각기 의미한다.

23) 역으로 ‘정부지출비중’ 변수를 제외하고 ‘재정자유도’만을 설명변수로 삼아 회귀분석할 수 있다. 추정결과 ‘재정자유도’의 변수는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 선택을 기본 회귀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본 연구의 주제가 “정부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표-6> 기본 회귀 방정식 추정결과

	Eq-3	Eq-3.1	Eq-4	Eq-4.1
	lpergdp	lpergdp	lpergdp	lpergdp
constant	3.7014 (13.17)***	3.2856 (10.98)***	4.7598 (32.13)***	4.5692 (29.51)***
busin_fr	0.0201 (6.53)***	0.0222 (6.86)***	0.0216 (6.99)***	0.0241 (7.38)***
fiscal_fr	0.0131 (4.41)***	0.0157 (4.98)***		
gov_size	0.0121 (6.48)***	0.0183 (8.85)***	0.0093 (5.23)***	0.0148 (7.47)***
anti_corrup	0.0443 (17.62)***	0.0418 (15.13)***	0.0422 (16.90)***	0.0389 (14.12)***
sample size	769	640	769	640
R bar **2	0.6857	0.7181	0.6781	0.7076
F-statistics	(419.9531)***	(408.1155)***	(540.3988)***	(516.4962)***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 기본 회귀식 보완: ‘정부지출비중’ 추정 계수의 부호가 정(+)인 이유

‘정부지출비중’의 회귀 계수가 정(+)의 값을 갖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일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부국’(富國)과 ‘상대적 빈국’(貧國)으로 나누어, 각각 정부지출비중 통계량을 계산했다.²⁴⁾ <표-7>에서 보듯이, 상대적 부국의 정부지출비중(40.87)이 상대적 빈국의 그것(24.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상대적 부국의 GDP대비 정부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사전적 기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부문 즉 공공부문의 지출에는 사회보장성 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사회복지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대적 빈국의 경우 GDP 대비 이전성(移轉性) 지출비중이 높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7> ‘상대적 부국’와 ‘상대적 빈국’의 정부지출규모 비교

	상대적 빈국	상대적 부국
표본평균(sample mean)	24.11	40.87
t-statistic	26.78	36.91
표본수	366	403

주: t-statistic = sample mean / standard error of sample mean

24) 일인당 국민소득(lpergdp)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중앙값(8.06)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국가를 ‘상대적 부국’, 중앙값 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국가를 ‘상대적 빈국’으로 분류하였다.

25) 정부지출비중(gov_size)은 GDP 대비 정부지출비중의 절대 값이 아닌 ‘지수’임에 유의해야 한다.

<표-7>에서처럼 일인당 GDP가 높은 국가의 정부지출규모가 큰 값을 가지므로, <표-6>의 Eq-3)에서 'gov_size'의 계수가 정(+)의 값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gov_size'가 '일인당 GDP'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역(逆)방향 즉 일인당 GDP가 정부지출규모를 결정하는 설명변수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을 갖는다.

<표-8>의 Eq-5)는 정부지출비중을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설명한 것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클수록 정부지출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보장 목적의 각종 이전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경제의 여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Eq-5.1)은 '인구 5백만' 이하 국가를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q-5)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의 계수 값(8.6524)이 인구 500만 이하 국가를 포함했을 때(6.72)보다 커짐을 알 수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정부지출비중을 유지하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은 <표-8>에서 종속변수인 정부지출비중의 평균치를 비교함으로써 보장된다. 인구 500백 미만의 국가를 제외했을 때의 정부지출비중 평균값(30.93)이 그렇지 않을 때의 평균값(32.89)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 500만 이하의 소규모 국가의 정부지출비중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소규모 인구 국가를 제외한 통상적인 국가의 경우, 정부지출비중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그 비중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음을 시사한다.

<표-8> '정부지출비중' 회귀식 추정

	Eq-5	Eq-5.1
	gov_size	gov_size
종속변수 평균치	32.89	30.93
constant	-23,1058 (-6.34)***	-38.1153 (-10.42)***
lpergdp	6.7283 (16.10)***	8.6524 (19.29)***
sample size	769	503
R bar **2	0.2517	0.4251
F-statistics	(259.28)***	(372.15)***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정부지출비중'(gov_size) 변수가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부국'으로 표본을 좁혀, 즉 같은 조건을 갖는 범주의 국가에 대해서

26) 이는 '와그너 법칙'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다.

회귀식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지출비중’은 인구 규모에도 의존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인구규모로 조정된 정부지출비중”(gov_size_adj)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 ‘gov_size_adj’는 2)식에서와 같이 “gov_size/st_pop”로 정의된다. st_pop는 각국 인구를 세계인구평균(3,613만명)²⁷⁾으로 나누어 표준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gov_size_adj는 정부지출비중을 표준화된 인구로 나누어, 국가 간 수평비교가 가능토록 자료를 가공한 것이다.²⁸⁾

$$\text{adjusted government size} = \text{government size} / \text{st_pop} \text{ -----2)}$$

$$(\text{st_pop} = \text{population} / \text{sample mean})$$

‘gov_size_adj’는 “gov_size/st_pop”로 정의되므로, st_pop의 값이 클수록 인수로 조정된 정부지출비중은 작아진다. 상대적 부국에 속하는 가상의 A국과 B국을 비교해 보자. A국의 인구규모가 세계평균인구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st_pop’는 ‘0.5’의 값을 갖게 된다. 반면 B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세계 평균의 2배라면 ‘st_pop’는 ‘2’의 값을 갖게 된다. A국과 B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같다면, 인구가 적은 A국은 ‘인수로 조정된 정부지출비중’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즉 A국은 방만한 ‘큰 정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큰 정부’를 운영함에 따른 ‘구축효과’가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구가 많은 B국은 상대적으로 A국에 비해 ‘작은 정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규모로 조정된 정부지출비중”(gov_size_adj)은 국가 간의 정부지출비중을 수평비교하기 위해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상대적 부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조정된 정부지출규모’(gov_size-adj)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9>에 정리되어 있다. Eq-6)에서 보듯이 ‘gov_size_adj’는 유의수준(significant level)이 10%에 접근한 정도에서 ‘부(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정부지출비중의 일인당 GDP에 미치는 ‘부(負)의 효과’가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자유도’(busin_fr)는 사전적 기대와 달리 부(-)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표본을 상대적 부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busin_fr’가 국가 간에 변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반(反)부패자유도’(anti_corrup)는 사전적 기대에 부합되는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활동자유도’를 제외하고 ‘조정된 정부지출규모’만을 설명변수로 삼아 추정한 회귀식이 Eq-6.1)이다. Eq-6.1)에서 보듯이 상대적 부국을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인구규모로 조정된 정부지출비중’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국민소득에 ‘부(負)의 효과’

27) 2004~2008년간 전체 표본국가의 평균인구는 3,613만명이다.
 28) 이 같은 변수의 변환이 너무 작위적이지 않은가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인수로 표준화된 변수간의 회귀분석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일인당 소비’를 ‘일인당 소득’으로 설명하는 것에 비견할 수 있다. 다만 ‘일인당 정부지출 비중’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gov_size_adj’를 설정한 것이다.

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다. 정부지출비중이 커질수록 민간경제활동을 구축해 일인당 국민소득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q-6)의 회귀식을 '상대적 빈국'에 대해 추정한 결과가 Eq-7)이다. '기업활동자유도'는 1%의 유의수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국의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기업활동자유도 개선은 기업활동의 장애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 빈국의 경우, 'gov_size_adj' 변수는 5%의 유의수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대적 빈국의 경우 공공부문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전지출'이 아닌 '사회간접자본지출'에 놓여 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정부지출증가는 민간경제활동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상대적 부국에서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 대신 보완효과(crowding-in effect)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9>의 추정결과는 선행 연구 개관에서 소개한 이지순(1991)의 '정부지출'과 '경제성장률' 간에 '역(逆) U자형' 관계와 같은 맥락의 분석이다.

<표-9> '조정된 정부지출규모'와 일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

	상대적 부국		상대적 빈국	
	Eq-6	Eq-6.1	Eq-7	Eq-7.1
	lpergdp	lpergdp	lpergdp	lpergdp
constant	8.1903 (40.33)***	7.6896 (105.83)***	4.5896 (13.78)***	5.6905 (38.67)***
busin fr	-0.0057 (-2.63)***		0.0143 (3.67)***	
adj_gov_size	-0.000018 (-1.80)*	-0.000018 (-1.86)*	0.000030 (2.27)**	0.000027 (2.01)**
anti corrup	0.0317 (23.02)***	0.0333 (26.74)***	0.0399 (7.47)***	0.0398 (7.33)***
sample size	403	403	366	366
R bar **2	0.6449	0.6396	0.1668	0.1382
F-statistic	(244.39)***	(357.79)***	(25.36)***	(30.27)***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V. 실증분석: 연립방정식 추정

1. 연립방정식 모형의 2단계 최소자승추정(2SLS)

3절에서는 기본 회귀식을 수정한 Eq-6.1)를 통해 ‘정부지출비중’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부(負)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지출비중’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의해 지탱될 수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로써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비중’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립방정식 체계(Eq-5, Eq-6.1)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당 정도로 높아야 비로소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 경제활동의 ‘구축’(crowding out)을 가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²⁹⁾

연립방정식모형은 복수의 구조방정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체계로서 ‘내생성(内生性)’을 특징으로 한다.³⁰⁾ 내생성으로 구조방정식의 설명변수들이 오차항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어, OLS에 의한 계수 추정은 편의(偏倚, bias)를 낳게 된다. 이 같은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최소추정법’(2SLS)을 원용한다.³¹⁾ 본 연구에서 2단계 최소추정법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연립방정식 체계는 3)식과 같이 정식화(定式化)된다. 3)식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는 ‘gov_size_adj’ 대신 ‘gov_size’ 변수가 사용되고 있다.

$$\begin{aligned} lpergdp &= f(gov_size, busin_fr, anti_corrup) \\ gov_size &= g(lpergdp, busin_fr, fiscal_fr) \quad \text{-----3)} \end{aligned}$$

일인당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변수는 ‘정부지출비중’(gov_size), ‘기업활동자유도’(busin_fr), ‘반(反)부패지수’(ani_corrup)이며. 정부지출비중을 결정하는 변수는 ‘일인당 국민소득’, ‘기업활동자유도’(busin_fr), ‘재정자유도’(fiscal_fr) 이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비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변수이고, 반(反)부패지수와

29) 정부지출비중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부(負)의 영향을 미치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정부지출비중에 정(正)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지출비중과 일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환류효과(feed back effect)가 존재한다.

30) 방정식 체계를 이루는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성 및 쌍방향적인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31) 연립방정식체계를 추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유도방정식’으로 전환해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다시 원래의 구조방정식의 계수로 환원하는 ‘간접최소자승법’(ILS)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별문제’(identification problem)가 대두된다. 연립방정식 내의 구조방정식의 회귀 계수들을 유도방정식의 회귀 계수들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방정식은 과소식별(under identified) 또는 비식별(unidentified)되었다고 하고 그 반대 경우를 식별(identified)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식별된 경우 유도방정식계수들로부터 구조방정식의 계수 값들이 유일하게 산출될 경우를 정확히 식별(exactly identified)되었다고 하고 2개 이상의 값으로 나타날 경우는 과도식별(over identified)되었다고 한다. 2단계 최소추정법으로 식별 또는 과도식별된 연립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다.

재정자유도는 각각 일인당 국민소득 및 정부지출비중 방정식을 ‘정확히 식별하게’(exactly identified) 해주는 변수이다.³²⁾ 2단계 최소추정법에 의한 연립방정식 추정결과는 <표-10>과 <표-11>에 정리되어 있다.

<표-10> 2SLS에 의한 ‘일인당 국민소득’ 추정식

	Eq-8	Eq-8.1
	lpergdp	lpergdp
constant	5.0969 (27.92)***	5.9704 (54.82)***
busin_fr	0.0199 (5.84)***	
gov_size	-0.0123 (-2.13)**	-0.0165 (-2.73)***
anti_corrup	0.0542 (13.35)***	0.0675 (19.16)***
sample size	769	769
분석기간	2004~2008	2004~2008
R bar **2	0.6159	0.5740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11> 2SLS에 의한 ‘정부지출비중’ 추정식

	Eq-9	Eq-9.1
	gov_size	gov_size
constant	20.8156 (3.12)***	23.5759 (3.73)***
busin_fr	-0.1727 (-2.32)**	
lpergdp	8.2053 (8.78)***	6.5551 (13.26)***
fiscal_fr	-0.5885 (-11.32)***	-0.5929 (-11.57)***
sample size	769	769
분석 기간	2004~2008	2004~2008
R bar **2	0.3549	0.3699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2SLS에 따른 분석결과 <표-10>의 Eq-8)에서 모든 설명변수는 사전적으로 기대

32) 연립방정식체계에서의 ‘선결변수’는 내생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의미한다. 우리의 분석에서 선결변수는 "busin_fr, fiscal_fr, anti_corrup" 이다.

되는 부호를 나타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기업활동자유도가 제고될 수록,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비중이 커질수록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구축함으로써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부지출비중은 5% 유의수준에서, 다른 설명변수들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설명변수들의 추정된 계수의 절대 값의 크기도 사전적 예측에 부합된다.³³⁾

<표-11>의 Eq-9) 역시 모든 설명변수는 사전적으로 기대되는 부호를 나타냈다. 정부지출비중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커질수록 증가하며, 기업활동자유도가 제고될수록 그리고 재정자유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계수가 정(+)³⁴⁾의 값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 기업활동자유도가 제고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 정부지출비중(특히 정부지출에서 투자적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또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낮아지고 GDP대비 조세수입이 낮아져 재정자유도가 개선되면 정부지출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다. Eq-8.1)과 Eq-9.1)은 연립방정식 체계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결변수만을 사용해 구조방정식을 다시 추정한 것이다. <표-10>과 <표-11>에서 보듯이 '기업활동자유도'가 포함된 경우와 비교해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Eq-8)과 Eq-9)의 조합을 기본모형으로 삼고자 한다. Eq-8)과 Eq-9)를 종합하면, 정부지출비중과 경제성장(일인당 국민소득)간의 동태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경제안정화를 위한 경기진작 차원에서 정부지출비중을 높이면³⁴⁾ 일인당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정부지출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일인당 국민소득)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출규모를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축소균형'에 이르게 됨을 시사한다.³⁵⁾ 즉 재정지출 확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2. 2008년을 제외한 2단계 최소추정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확장적 재정지출이 구축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1

33) <표-10>의 회귀식 Eq-8)에서 계수의 절대 값이 갖는 순서는 직관에 부합된다. 청렴도 개선은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그만큼 경제전반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추기 때문에 성장에 미치는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활동자유도 개선도 상대적으로 성장에 큰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정부개입은 민간경제활동을 구축하는 효과도 있지만, 정부지출 중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보장 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crowding-in) 사회적 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순계로서의 경제성장에는 '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귀식 Eq-8)은 이 같은 사전적 기대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정확히는 정부지출비중을 높인다고 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면 GDP대비 정부지출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35) 축소균형이란, 'gov_size'를 증가시키면 'log(pergdp)'가 낮아지게 되고, 'log(pergdp)'가 낮아지면 'gov_size'를 유지할 경제적 여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2004~2008년에 걸친 분석기간의 ‘특이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론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2008년’은 2007년 미국 발(發) 서브프라임(sub prime) 모기지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된 시기로, 많은 국가가 위기대응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지출규모를 확대한 시기이며, 금융위기로 성장이 지체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8년에 나타난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저성장’과 위기대응 차원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합이 ‘과대 해석’된 나머지, 확장적 재정정책이 저성장의 원인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본 연구는 이 같은 반론을 예상하고, 서브 프라임의 충격을 제외시키기 위해, 2008년도 자료를 제거한 2004~2007년의 자료로써 회귀식을 다시 추정하였다. 연도별 분석대상 국가가 176개국이므로, 표본 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³⁷⁾ <표-12>와 <표-13>에 실증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실증분석 결과의 질적(質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2004-2008년의 자료로 실증 분석한 결과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08년 위기상황 이전에도 확장적 재정지출과 저성장의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시사한다.

<표-12> 2SLS에 의한 ‘일인당 국민소득’ 추정식 (2004~2007)

	Eq-10	Eq-10.1
	lpergdp	lpergdp
constant	5.1063 (24.81)***	5.9023 (54.10)***
busin_fr	0.0180 (4.53)***	
gov_size	-0.0125 (-2.05)**	-0.0174 (-2.74)***
anti_corrup	0.0560 (12.18)***	0.0686 (17.78)***
sample size	604	604
분석기간	2004~2007	2004~2007
R bar **2	0.6257	0.5848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36) 2008년의 자료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37) 앞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의 정부지출비중의 평균값은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에 각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에 소득은 평균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의 파장이 일부 선진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13> 2SLS에 의한 ‘정부지출비중’ 추정식 (2004~2007)

	Eq-9	Eq-9.1
	gov_size	gov_size
constant	20.4785 (3.06)***	25.3864 (4.01)***
busin_fr	-0.2142 (-2.76)***	
lpergdp	8.8223 (9.33)***	6.6119 (13.38)***
fiscal_fr	-0.6189 (-11.64)***	-0.6264 (-12.01)***
sample size	604	604
분석기간	2004~2007	2004~2007
R bar **2	0.4196	0.4401

주: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VI. 요약 및 결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100년만에 도래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규정하고, 수퍼 추경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했다. 그 기저의 논리는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하며, 충분한 양의 외부 충격(부양)으로 경기침체를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의 경제위기 상황이 한국경제에 전대미문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합리화할 만큼의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었는지를 냉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³⁸⁾

물론 2009년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면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국민경제에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량화가 쉽지 않아 주목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숨은 비용’은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킨다. “구조조정의 지연, 재정 건정성 훼손, 정부에의 의존의 타성화” 등이 ‘숨은 비용’의 전형적 이룬다. “빛을 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한국의 정책 행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³⁹⁾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38) 1998년과 2009년의 위기상황은 그 원인과 전개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다. 외환위기는 한국적 경제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위기이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실화(失火)이다. 하지만 2009년 경제위기는 외부로부터 초래된 것으로, ‘ 옮겨 붙은 불’에 비견된다. 분명한 것은 2009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은 1998년 보다 훨씬 견실하다는 사실이다.

39)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구조조정과 부실정리를 미루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재정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킨다”라는 가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판명하고자 했다.

2004~2008년에 걸친 176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자료를 이용해 얻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지출에는 경상지출 외에 사회간접자본 지출 같은 투자지출, 사회보장지출 같은 이전지출 등이 포함되는 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활동자유도’와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정부지출규모’가 커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부지출규모 확대가 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포착한 것이, 본 연구의 기여이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규모’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성’(内生性)을 확인하고,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했다. 연립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한 정도로 높아야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비중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의 ‘구축’(crowding out)을 가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⁴⁰⁾ 결국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즉 경제성장은 ‘정부지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을 그만큼 잠식하게 된다.

성장잠재력은 통상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경제성장 여력을 의미하나,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원천’으로 정의된다. 국민소득은 ‘정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원천’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정부지출은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장기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장기분석은 외부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충격이 모형내의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어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이르렀을 때, 초기 충격이 내생변수에 미친 변화의 크기를 측정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김성순, 2009)는 구체적으로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설정해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누적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케인즈(Keynes)적인 정책사고에 기초한 분석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40) 정부지출확대는 민간경제활동의 ‘구축’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負)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보장지출 등은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복지에 ‘안주’함으로써 ‘자력 의지’를 저상(沮喪)시키게 된다. 결국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부’(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⁴¹⁾

본 논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負)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패널자료(176개국*5개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패널데이터는 내용적으로는 ‘횡단면 자료’이다. 횡단면 분석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의제(擬制)된 장기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횡단면 자료는 “상이한 발전단계에 놓인 상이한 국가들의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가 특정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시계열자료에서의 장기효과로 의제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지출비중이 커지는 경우, 즉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의 자유도”(freedom from government)가 저하될 때 일인당 국민소득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변화하는 지, 반대로 일인당 소득이 증가할 때 정부지출규모에 어떠한 추세적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장기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실증분석은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비중 간의 쌍방 인과관계로, 의제된 ‘비교정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비중이 확대되었을 때, 그 같은 충격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1차 효과’와 그에 따른 정부지출비중에 환류되는 ‘2차 효과’를 합하면 비교정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추정식에 의하면, 정부지출규모를 1단위 확대하면 일인당 GDP를 ‘-0.0123’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0.1009 (= -0.0123*8.2053)’의 정부지출규모를 감소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부’(負)의 성장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헤리티지 재단의 ‘질적 데이터’(soft data)인 ‘경제자유도’ 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적 변수가 아닌 질적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채택한 것 자체가, 본 연구의 제약점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 방향은 정부지출 비중을 ‘생산적 지출’과 ‘소비성 지출’로 나누고, 지출구성의 차이가 성장에의 어떤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41) GDP에 대비한 정부지출규모 확대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성순, “정부지출의 부문별 경제적 효과 분석”,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VAR approach”, 재정정책논집, 제11
집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 김용선, 김현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제6권 제3호, 한국은행,
2000
- 김의섭, “한국의 재정지출과 와그너 법칙: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
로”, 재정정책논집, 제11집 제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 이종원, 이상돈, “RATS를 이용한 계량경제분석”, 제3판, 박영사, 2005
- 이지순, “공공지출과 경제활동”, 경제논집 제27권4호, 서울대학교, 1988
_____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제논집 30권4호, 서울 대학교,
1991
- 조동근,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CFE Report No. 97,
자유기업원, 2009
- 황규선,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 와그너 법칙의 검정”, 재정정책 논집,
제6권, 한국재정정책학회, 2004
- Afxentiou, P. C., and A. Serletis., (1991) “A Time-Serie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GDP in Canada” Public
Finance Quarterly, Vol.19, No.3, pp.316-333
- Aschauer, D. A., (1989)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06, pp.177-200
- Barro, R. J., "A Cross-country Study of Growth, Saving and Government Spending",
NBER Working Paper No. 2855, 1989.
- Barro, R. J., "Economic Growth in Cross Section of Count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2 PP.407-443.
- Easterly, W. & S Rebelo., (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4499.
- Heritage Foundation,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 2005-2009 data
- Lee, J., (1990)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Korean Economic
Development, Greenwood Press, pp. 263-290
- Miller, S. M. & F. S Russek., (1997) “Fiscal Structures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Evidence”, Economic Inquiry, Oxford University Press, vol.
35(3), pp. 603-13, July.
- Ram, R., (1986)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 A New Framework and
Some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 Series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March, pp.191-203
- Singh, B. and B. S. Sahni., (1984) “Causality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nation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6, pp.630-644.
- World bank, world bank database indicator(WDI)

<abstract>

In order to overcome global economic depression derived from the shock of sub-prime mortgage in USA in 2007,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tended to exercise unprecedented fiscal expansion in 2009. Even no one can deny the positiv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however, a question arises whether its effect can be sustai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government's spending on economic growth from the viewpoint of 'Libertarian economics'.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get data of GDP per capita from the 'World Bank'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data of Economic Freedom Index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as the explanatory variables. The generated data is the panel data through 2004~2008 years and of 176 countries. We intended to in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size and GDP per capita.

From the analysis, we can draw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expenditure. Since excessive government expenditure may decrease GDP per capita through the 'crowding-out effects', the fiscal expansion would be destined to deteriorate the 'foundation' of sustaining the high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